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의결안건 제77호 관련)

2021. 5. 18.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5월 18일(화) 14:08~19:23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 원 장

<의결 제77호 및 제237호('20년)~제239호('20년)>

이 명 순 위 원

이 상 복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4. 회의경과

□ 의결안건 제77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함.

- (위원장) 제77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의결하겠음. 의결안건 제77호와 관련하여 증선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쟁점들에 대한 증선위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음. 첫 번째, 설명내용 확인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행위별 세부목록 관련하여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각 위반행위별 세부목록을 증선위 지시로 금감원이 기업은행에 다시 제공해 주기 이전까지 기업은행이 세부목록 일부를 금감원과 다르게 파악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음.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감원은 향후 위반행위별 세부목록 등을 제재대상자에게 정확하게 통지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검사방식 관련하여 금감원은 검사과정에서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객관식 형태의 ‘질문서’를 발부하여 그 답변결과를 제재근거로 활용하였음. 본 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4조를 감안하여 이와 같이 진행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했으나, 객관식 형태의 질문서 사용은 구체적인 답변 경위와 관련한 제재대상자의 이의제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검사 과정에서는 지양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추가문답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지막으로, 설명내용 확인의무 이행 주체 관련임. 기업은행은 대필 여부가 법령상 의무 이행에 있어

형식적 미흡사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금번 증선위 논의를 통해 설명내용 확인은 본질적으로 투자자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이며,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자가 투자자 본인 대신 서명·기명날인 등을 한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음. 다음으로 위반행위별 세부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음. 첫째,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펀드와 □□□□□□펀드 30건 그리고 ⊗⊗⊗⊗신탁 4건 등 총 34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는 행위에 대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6건을 제외한 28건을 기준으로 舊「자본시장법」 제47조제2항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총 16.8억 원의 부과를 건의하였음. 그러나 금감원 질문서 및 기업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근거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업은행 자체점검 세부내용을 살펴본 결과 2건은 설명내용 확인을 투자자가 직접 한 것으로 보여짐. 이에, 증선위는 투자자가 설명내용 확인을 직접 이행했을 개연성이 있는 2건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둘째,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펀드와 □□□□□□펀드 78건 그리고 ⊗⊗⊗⊗신탁 11건 등 총 89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서를 “교부받았음” 또는 “수령거절함”으로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건의한 26건을 제외한 63건을 기준으로 기업은행에 대해 舊「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제9호나목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총 31.5억

원의 과태료 부과조치를 건의하였음. 금감원 질문서 답변 및 기업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기초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그 결과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명확하지 않은 한, 일관성 있게 답변 및 점검내용을 신뢰할 필요가 있음. 금감원 질문서에 판매직원이 ④번(④본인이 임의로 '받았음'에 체크하였고, (간이)투자설명서를 직접 교부하였음)으로 답변한 3건 중 답변내용과 실제 서류가 불일치하는 1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은 서류상 하자가 없으며 설명서를 교부했다는 직원 답변에 일관성이 있으므로 '위반'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한편, 금감원 질문서에 판매직원이 ⑥번(⑥본인이 임의로 '거부함'에 체크하였고, (간이)투자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았음)으로 답변한 건 중 기업은행 자체점검 결과도 '적정'인 8건은 투자자 의사를 반영하여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증선위는 금감원 질문서 및 기업은행 자체점검 결과 위반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10건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한편, 금감원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산정한 63건 중 57건은 설명내용 확인의무는 이행하였으므로 판매과정에서 설명을 위한 문서가 제시되었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위반동기의 감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단, 그 중 금감원 질문서에 ②번(②투자자가 직접 '받았음'에 체크하였으나, (간이)투자설명서는 교부하지 않았음)과 ⑤번(⑤본인이 임의로 '받았음'에 체크하였으나, (간이)투자설명서는 교부하지 않았음)으로 답변한 39건은 특별한 사정없이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여 감경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업은행 자체점검 결과 '부

적정'으로 분류된 5건도 설명서 교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위반동기의 감경이 어렵다고 보여짐. 따라서 총 13건에 대한 위반동기의 감경이 가능하나, 이중 10건은 앞서 위반건수에서 이미 제외되었으므로 나머지 3건만이 위반동기 감경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에, 증선위는 총 3건에 대해 위반동기를 '상'에서 '하'로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셋째,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라임신탁과 관련하여 기업은행이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증이 없거나 자격증 효력이 정지된 직원 3명이 총 8건의 투자권유를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28호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으로 총 4억 원의 과태료 부과조치를 건의하였음. 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적대상 관련 직원들의 자격증 보유 여부를 재확인한 결과, 금감원이 지적한 8건 중 6건과 관련된 직원 3명은 투자권유 당시 관련 자격증을 적법하게 갖추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음. 이에, 증선위는 투자권유자문인력 규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6건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넷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투자자 6명에게 총 8건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0조제3항제3호의 투자광고 규정 위반으로 총 4억 원의 과태료 부과조치를 건의하였음. 동 건 위반건수가 상당히 적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 중 기업은행이 투자자 요청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경위서를 제출한 2건은 '투자광고'가 아닌 단순한 안내문자로 오인한 일부 영업점 직원의 규정 미숙지로

부터 비롯된 과실로 보여짐. 이에, 증선위는 해당 2건에 대해 위반동기를 '상(고의)'에서 '중(중과실)'으로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